

WEEKLY REPORT

# KMI 동향분석

**VOL.30**  
2017 MAY

발간년월 2017년 5월(통권 제30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http://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새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 향후 5년간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민간일자리 8만개 견인 가능 -



2017년 4월 국내 전체 실업자 수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17만 명을 기록했으며, 청년 실업자는 11.2%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있는 추세와도 대비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1호 행정 명령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정예산으로 10조 원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2014년 기준 해양수산 분야 취업자 수는 약 67만 명으로 추정된다. 2011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양자원 개발, 해상 교역량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등 바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해양수산 일자리는 항만도시, 해양관광 도시, 어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이자 세계 시장과 맞닿아있는 글로벌 일자리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향후 5년간 공공일자리 1만개와 공공사업을 통해 민간일자리 8만개 등 총 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일자리의 경우 해양경비 및 안전 분야,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분야, 해양환경 관리 분야, 어촌경제 활성화 분야, 해양수산 글로벌 협력 분야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하지만 공공서비스는 부족했던 분야이자 정부가 직접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분야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가 갖고 있는 글로벌 특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 중 해운물류 청년인력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경우 글로벌 일자리를 개척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해운중개업 육성사업, 해양재해 대응 연안정비사업, 섬지역 소규모 항포구 정비사업,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등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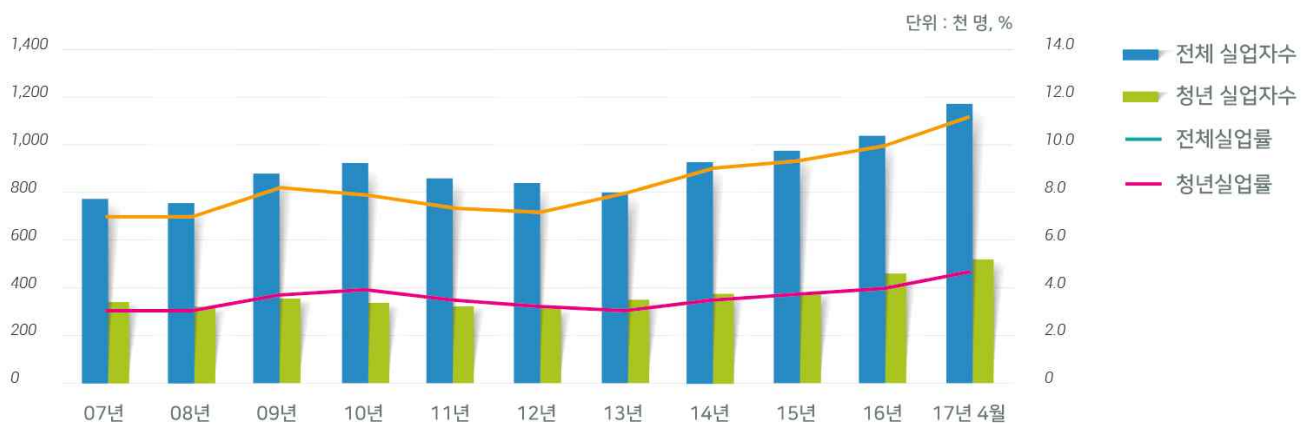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관련 통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먼저 고용현황, 인력 수급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항만배후지나 어촌지역의 고용통계 등 정책수행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평가할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수행자들의 실적 평가 시 고용 창출 실적을 최상위 평가지표로 반영함으로써 고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당면 과제로 대두

### ■ 2017년 4월 국내 전체 실업자 수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17만 명,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한 11.2% 기록

-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전체 실업자 수는 101만 명(실업률 3.7%)으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7년 4월에는 더욱 증가한 117만 명(실업률 4.2%)을 기록하여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특히, 청년실업자(15~29세) 수는 2017년 4월 기준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실업률은 1998년 12.2%를 기록한 이후 최고인 11.2%를 기록하여 19년 만에 외환위기 직후 상황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았음

그림 1. 국내 실업자 수와 실업률 추이(2007~2017.4)



### ■ 세계 주요국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안정을 찾고 있는 중이나,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히 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미래 일자리 대량 상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확대

-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던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은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전체 실업률(% , '10→'16) : 미국(9.6→4.87), EU(9.5→8.5), 영국(7.8→4.8), OECD(8.3→6.3)

- 세계 주요국의 청년실업률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실업률에 비해 변동의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증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

- \* 청년 실업률(% , '10→'16) : 미국(18.4→10.4), EU(21.0→18.7), 영국(19.9→12.9), OECD(16.7→12.9)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710만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총 5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됨

그림 2. 세계 주요국 전체 실업률 추이(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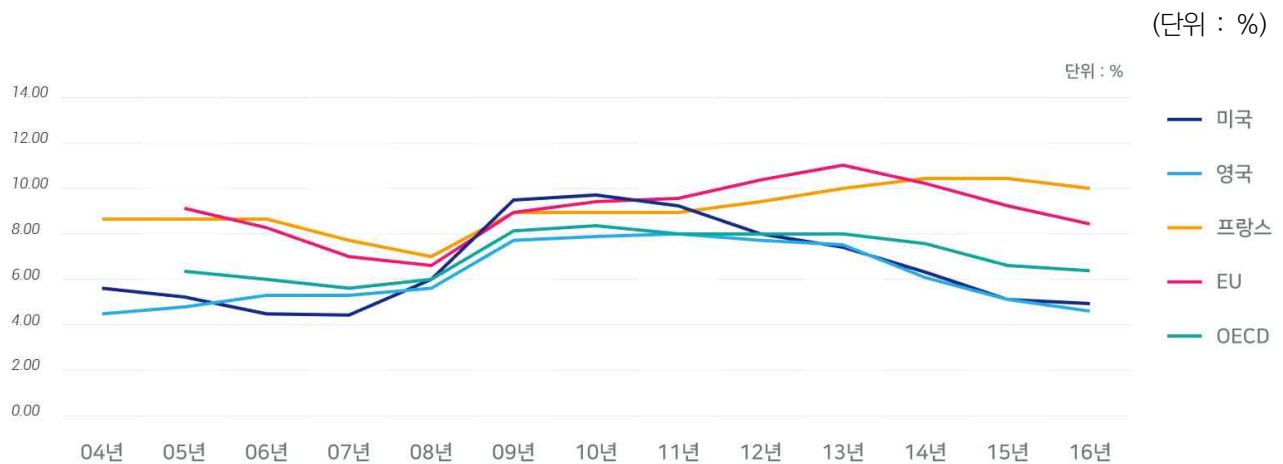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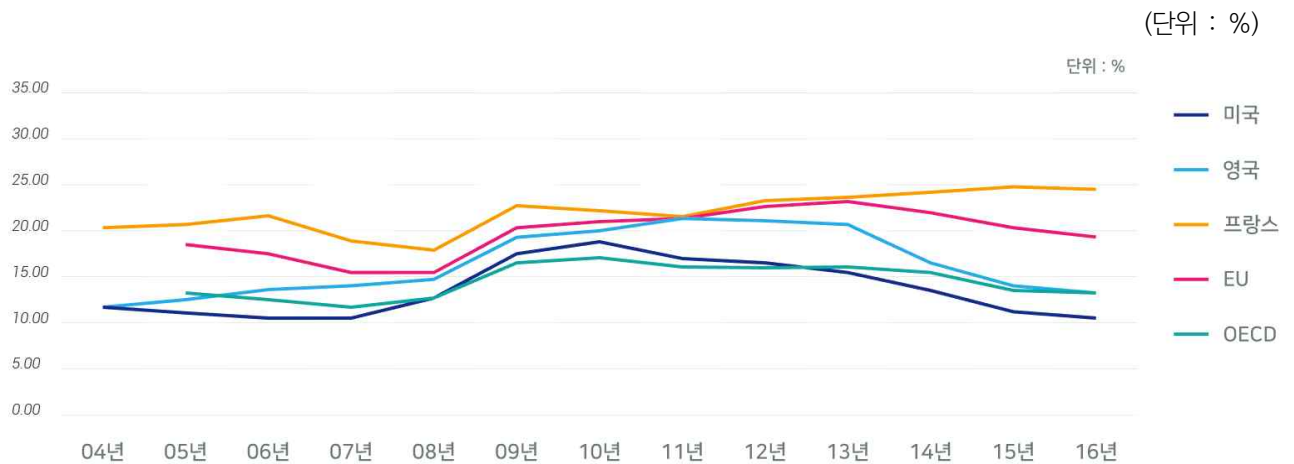


그림 3. 세계 주요국 청년 실업률 추이(2007~2016)



## ■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고 우선순위로 선정

- 새 정부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지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공식화 등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최고 우선순위에 위치함
- 대선 전 공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간접적 실행 계획을 제시함
  -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과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 등 간접적인 지원
  -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개편하는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 해양수산 분야 취업자는 완만하게 증가 중이나 청년 취업은 미흡

### ■ 2014년 기준 해양수산 분야 취업자 수는 약 67만 명으로 전 산업의 2.8% 차지

- 2014년 해양수산 분야의 취업자 수는 66만 6,071명으로 전체산업 취업자 수(2,356만 7,991명) 중 2.83%를 차지함
  - 해양수산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정체되어 있음
  - 다만 해운과 조선의 동반침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 상황은 2014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해양수산업 10개 분야<sup>1)</sup> 중에는 조선업의 취업자 수가 16만 6,5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양자원개발업은 4,39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조선업과 수산업의 취업자 수 비중이 47.1%를 차지하였으며, 해양환경업과 해양자원개발업의 비중은 2.0%로 해양수산 분야의 취업자는 전반적으로 전통해양산업에 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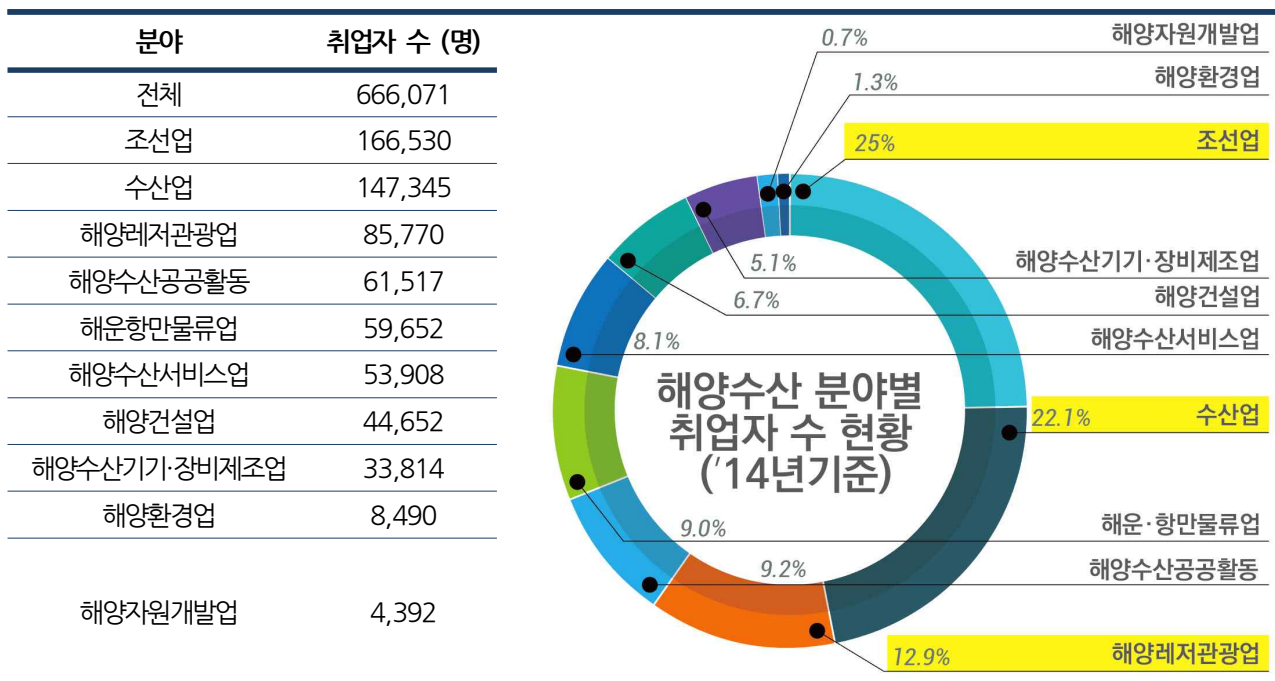
1) 해양수산업은 조선업, 수산업, 해양레저관광업, 해양수상공공활동, 해운항만물류업, 해양수산서비스업, 해양건설업, 해양수산기기·장비제조업, 해양환경업, 해양자원개발업으로 구분(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산업통계 예비조사 및 조사 지침(안) 수립 연구, 2016.2)

그림 4. 해양수산 분야 취업자 수 추이(2011~2014)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2016), 해양수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장전망 분석

그림 5. 해양수산 분야별 취업자 수 현황(2014년 기준)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2016), 해양수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장전망 분석

## ■ 해양수산 분야 졸업생의 취업률은 63.7%로 전체 졸업생 취업률보다 낮은 상황

- 해양수산 분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12년 68.7%, 2013년 63.0%, 2014년 59.5%로 감소 추세임
- 지난 3년 동안 전체 교육기관 취업률이 0.9%p 감소한 것에 비해 해양수산 분야 취업률은 9.2%p 감소함
- 해양수산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59.6%,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72.2%(석·박사 평균)로 전체 취업률 대비 각각 5.5%p, 6.5%p 낮은 수준

표 1. 해양수산계 졸업생 취업률 추이(2012~2014)

구분	전체 교육기관 취업률 (%)				해양수산 분야 교육기관 취업률 (%)				
	2012	2013	2014	평균	2012	2013	2014	평균	
전문대학	68.1	67.9	67.8	67.9	58.1	62.0	32.9	51.0	
대학교	66.0	64.8	64.5	65.1	60.0	60.3	58.4	59.6	
대학원	석사	79.3	78.1	76.5	78.0	82.6	61.4	69.7	71.2
	박사	78.5	79.3	79.7	79.2	74.2	68.3	76.8	73.1
평균	73.0	72.5	72.1	72.6	68.7	63.0	59.5	63.7	

자료: 해양수산부(2016),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해양수산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이자 글로벌 일자리

### ■ 해양수산 일자리는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지역과 글로벌 일자리

- 육상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 해양수산업은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개발, 해양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해양자원 개발, 해상 교역량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등 바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회 역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해양수산 일자리는 항만도시, 해양관광도시, 어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이자 세계 시장과 맞닿아있는 글로벌 일자리로서 대한민국 여성과 청년들이 도전할만한 분야임

## ■ OECD(2016)는 2010~203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 증가율을 29.7%로 전망

- 2010~203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 증가율은 29.7%로 전산업의 고용 증가율(27.5%)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해상풍력 분야는 고용 인원이 가장 적지만 증가율은 1,15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10개 산업 분야 중 유일하게 잡는 어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세계 해양산업 고용 현황 및 전망(2010년, 2030년)

(단위 : 천명, %)

산업	2010년	2030년	증감율
양식업	2,076	3,166	52.5
잡는 어업	10,976	10,305	- 6.1
수산가공	2,399	4,946	106.2
해양관광	6,958	8,520	22.4
해양 장비	2,145	2,660	24.0
해상 석유 및 가스	1,840	2,316	25.9
해상 풍력	38	475	1,150.0
항만	1,737	4,256	145.0
조선 및 수리	1,875	2,325	24.0
해상 교통	1,193	1,546	29.6
총 규모	31,238	40,515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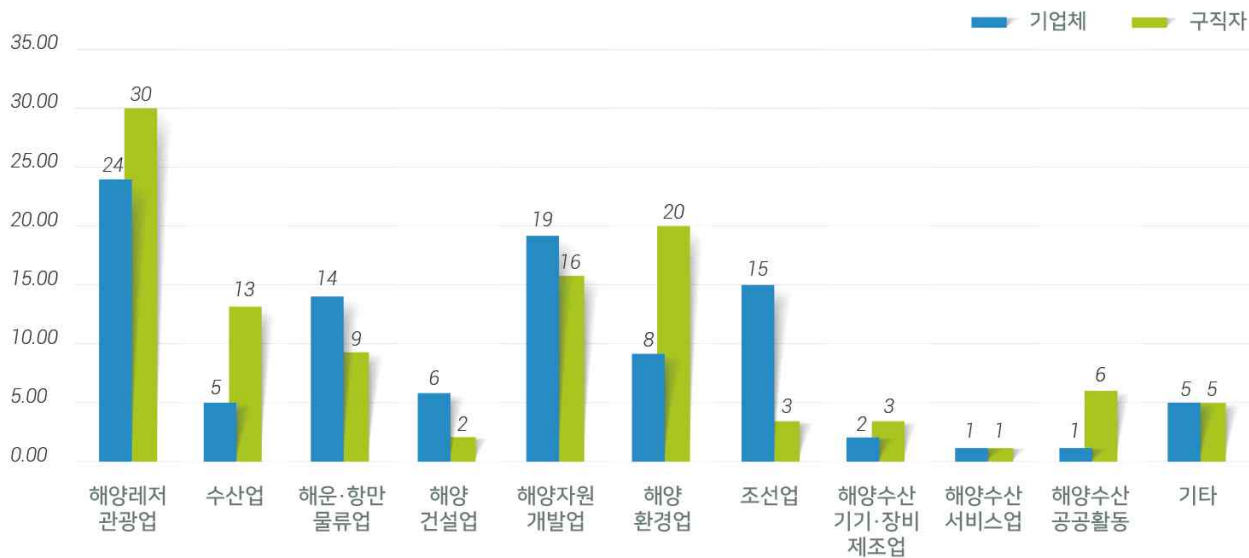
자료 :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 ■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 및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해양수산부(2016)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산 기업체 종사자 및 구직자들은 해양레저관광업, 해양자원개발업, 해양환경업 분야가 향후 고용 및 취업 활성화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sup>2)</sup>
  - 상대적으로 해양수산서비스업과 해양수산기·장비제조업은 낮은 응답 비중을 보임

2) 해양수산 관련 100개 기업체와 해양수산 관련 구직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조사기간 : 2015.12.7.~12.23)

그림 6. 해양수산 관련 기업체 및 구직자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자료: 해양수산부(2016),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동향 파악 및 고용 활성화방안 연구

## 향후 5년간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민간일자리 8만개 견인 가능

### ■ 향후 5년간 해양수산 공공부문에 약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영토 관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활동 보장, 해양수산업 육성, 어촌의 활력 제고 등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1만 명 이상의 공공일자리 조성이 필요함
  - 해양영토를 굳건하게 수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 인력과 안전요원, 해양영토 및 국제해양법규 전문가, 해양스포츠 관련 전문강사의 고용 확대가 시급함
  -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안전관리, 수산자원 및 환경 관리, 수산물 촉진 등을 위한 관리·감독·조사 인력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함
  - 해운과 조선, 항만 등 글로벌 경쟁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이러한 조직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 고용이 필요함
- 특히 해양경비 및 안전 분야와 수산물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수요도 많은 분야로 파악됨
  - 중국의 불법어업 등 주변국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산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일자리의 대폭 증대가 필요

표 3. 해양수산 분야 공공부문 직접고용 일자리 규모

(단위 : 명)

구분	세부 내역	고용인원	
해양경비 및 안전 분야	▪ 현장 해양경비 인력(단수 3교대→복수 2교대)	1,758	3,651
	▪ 신규 해양장비 운용요원	713	
	▪ 해수욕장 안전지킴이(단, 여름철 고용되는 비상근 인력)	1,180	
해양영토 관리 분야	▪ 국제해양법규범연구소 연구 및 관리인력	30	742
	▪ 독도 전문강사	712	
생존수영 등 해양스포츠 교육 분야	▪ 해양스포츠 전담교사	170	970
	▪ 해양레저체험교실 전문강사	24	
	▪ 국민체육센터 해양스포츠 강사	438	
	▪ 내륙 스쿠버다이빙 교육장 전문강사 및 운용요원	30	
	▪ 해양체육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요원	160	
	▪ 연안 시군구 해양치유공원 해양치유지도사 및 해양치유복지사	148	
수산물 안전관리 분야	▪ 수산시장 위생 관리 및 가격표시 단속요원	500	2,033
	▪ 수산물 클린인증 읍저버 및 관리요원	1,150	
	▪ 수산질병관리사	361	
	▪ 어업안전재해예방센터 연구 및 관리인력	22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관리 분야	▪ 원양어선 관리감독원	30	471
	▪ TAC(총허용어획량) 조사원	261	
	▪ 해양생태계 명예지도원	180	
수산물 소비촉진 분야	▪ 급식용 수산물 영양홍보 및 요리교육 강사	178	738
	▪ 수산식품수출가공 R&D센터 연구 및 관리인력	320	
	▪ 수산식품수출가공협력지원센터 마케터 및 관리인력	160	
	▪ 전통관광명소시장 통역관광가이드	80	
어촌경제 활성화 분야	▪ 어항경영활성화센터 연구 및 관리인력	657	702
	▪ 어촌특화지원센터 종사인력	45	
해운-조선 재건 분야	▪ 한국선박금융공사 종사인력(기획, 금융, 재무관리 등)	420	720
	▪ 해운정보센터 종사인력	50	
	▪ 해운창업보육센터 종사인력	200	
	▪ 해운조선관측센터 종사인력	50	
해운항만 환경 개선 분야	▪ 항만구역 대기질 관측센터 종사인력	150	183
	▪ 선박안전검사원 증원 종사인력	33	
해운신시장 개척 분야	▪ LNG추진선박 및 벙커링 기자재인증센터 종사인력	300	482
	▪ E-Navigation 통합운영본부 및 LTE-M망 운영센터 종사인력	128	
	▪ IMO 국제해사기구 대응센터 및 국제표준화 종사인력	54	
해양수산 글로벌 협력 분야	▪ 재해대응 분야 ODA 사업 파견 전문가	10	72
	▪ 양식 등 수산업 분야 ODA 사업 파견 전문가	40	
	▪ 국제수산기구 파견 전문가	22	
합계		10,764	

## ■ 해양수산 공공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약 8만개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해양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자리는 7만 9,818개에 달함
- 특히 해양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약 5만개의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 또한 연안재해 저감, 수출입 무역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성장거점 조성 등 공공인프라 기능이 강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약 3만 개의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삶과 해외시장 진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

표 4. 해양수산 분야 공공투자에 의한 민간부문 일자리 규모

(단위 : 명)

구분	세부 내역	고용인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 분야	▪ 빅데이터 기반 해양공간정보사업	1,819	48,663
	▪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사업	9,000	
	▪ 어촌지역의 6차산업화 시범사업	900	
	▪ 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지원사업	20,108	
	▪ 내수면어업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	1,282	
	▪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보급사업	660	
	▪ E-Navigation 기반 디지털선박 보급 지원사업	876	
	▪ 해운중개업 육성사업	90	
	▪ 국제물류주산업 공공브랜드화 사업	2,000	
	▪ 국적 메가컨테이너 원양선사 육성사업	9,300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육성사업	2,512		
▪ 해운해사 빅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116		
연안재해 저감 분야	▪ 해양재해 대응 연안정비 사업	228	6,372
	▪ 섬지역 소규모 항포구 정비사업	5,460	
	▪ 노후 또는 낙후 연안지역 도시재생사업	684	
수출입 무역인프라 구축 분야	▪ 해운물류 청년인력 해외진출 프로젝트	10,383	10,383
항만유희공간의 지역경제 성장거점 조성 분야	▪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5,000	13,850
	▪ 3대 항만 자유무역지대 조성사업	6,750	
	▪ 항만유희부지 내 R&D 및 창업밸리 조성사업	2,100	
합계		79,268	

## 해양수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 필요

### ■ 일자리 만들기는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 출발

- 정책수행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평가할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함
  - 항만배후지 사업체 고용통계, 어촌지역 고용 및 인구통계 등
- 해양수산 분야 고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통계 정보를 제공함
  - 고용현황, 해양수산업 학교 졸업자 취업 현황, 기존 종사자의 이직 및 전직 현황 및 사유, 향후 고용예정 규모,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등

### ■ 정책수행자들의 실적 평가 시 고용 창출 실적을 최상위 평가지표로 반영

- 고용 창출 실적을 정책수행자들에 대한 평가지표 최상위에 둠
  - 평가지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둬으로써 고용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 유도

### ■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 학사제도, 대학 및 연구기관의 평가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기술개발에 성공한 해양수산 R&D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함
- 경연대회, 투자설명회 등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함
- 기술가치 평가 및 진단, 창업보육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창업지원시스템을 도입함

### ■ 근로환경 개선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일자리 만들기 참여 유도

-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고도화 사업을 추가하고, 교육기관 선정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대학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협회 등의 참여를 확대함
- 여성과 청년들을 위해 항만 등 사업장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경력개발프로그램(CDP) 등을 도입해 이탈을 방지함
- 해양수산 관련 전문기관의 종사자 및 퇴직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컨설턴트의 자문 및 파견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함

-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 강화
- 특히 산·학·연 퇴직자를 활용함으로써 노년층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및 일자리 제공
- 현장실습장을 제공하거나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국책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 집필 연구진 ]

### 정명생 부원장

(msjoung@kmi.re.kr/051-797-4302)

### 윤성순 해양정책연구실장

(ssyoon@kmi.re.kr/051-797-4711)

### 김경신 부연구위원

(kskim@kmi.re.kr/051-797-4714)

###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 이정아 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 윤인주 전문연구원

(mouthpiece@kmi.re.kr/051-797-4724)

### 육근형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

(ykh690@kmi.re.kr/051-797-4733)

### 최희정 전문연구원

(chj1013@kmi.re.kr/051-797-4735)

### 장홍석 수산정책연구실장

(changhs@kmi.re.kr/051-797-4542)

### 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

(jlee8793@kmi.re.kr/051-797-4551)

### 이승우 어촌정책연구실장

(swlee@kmi.re.kr/051-797-4561)

### 정명화 국제수산업연구실장

(jmh@kmi.re.kr/051-797-4571)

### 마창모 양식산업연구실장

(mcm1866@kmi.re.kr/051-797-4581)

### 임경희 해외시장분석센터장

(imkh@kmi.re.kr/051-797-4591)

### 김태일 해운정책연구실장

(ktizorro@kmi.re.kr/051-797-4613)

### 최영석 전문연구원

(yschoe@kmi.re.kr/051-797-4617)

### 이호춘 부연구위원

(leehochoon@kmi.re.kr/051-797-4623)

### 김주현 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36)

### 박한선 해사안전연구실장

(hspark@kmi.re.kr/051-797-4627)

### 윤희성 연구원

(heesung@kmi.re.kr/051-797-4637)

### 김근섭 항만정책연구실장

(gskim@kmi.re.kr/051-797-4662)

### 김은수 국제물류연구실장

(kes1213@kmi.re.kr/051-797-4665)

### 박광서 성장동력실장

(kspark@kmi.re.kr/051-797-4722)

### 최석우 전문연구원

(schoi@kmi.re.kr/051-797-4777)

### 이정민 연구원

(jmin@kmi.re.kr/051-797-4769)

### 백인기 전문연구원

(ikpaik@kmi.re.kr/051-797-4795)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들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8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5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싼 가격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촌마을을 살릴 지혜로운 소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재발견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에서 초세먼지 오염도, 선박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2017.05.19
제29호	中 알뜰물류,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URL : <http://www.kmi.re.kr/web/trebook/list.do?rbsidx=273>